

전주종합경기장 '미스의 숲' 조성 승인

'종합경기장 내 전시컨벤션센터·호텔건립 사업'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지역 미스 산업의 핵심이 될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을 짓는 '미스의 숲' 조성사업에 대한 정부 승인이 났다.

전주시는 '전주 종합경기장내 전시컨벤션센터 및 호텔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2년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의 분과심사와 본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예산의 계획적·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대형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전주 전시컨벤션 및 호텔 건립 사업의 경우 전액 민간자본으로 시행되지만 사유지에 건립되는 관계로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는 이번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민간사업자와의 사업협의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을 받아냈다. 시는 이에 따라 승인 조건 사항 해소를 위해 민간사업자와 구체적인 사업 규모, 시기, 임대기간, 호텔운영 방식 등을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및 호텔건립사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4대 지역관광 거점도시로서 대규모 회의 및 전시 행사 규모를 축소하거나 개최를 포기하는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MICE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전시컨벤션센터는 5000㎡ 규모의 전시장과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국제회의실, 중·소규모의 회의실 10실 등을 갖춘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

이다. 전시컨벤션 지원시설인 호텔의 경우 객실 200실, 4성급 이상의 지상 10층 규모로 계획돼 있다.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액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시는 이번 중앙투자심사 결과로 전시컨벤션센터 및 호텔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물꼬가 트인 만큼 상대적으로 경제 상황이 열악한 전북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거점공간이 될 수 있도록 남은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날 중 '정원의 숲' 조성사업이 착수하는 데다 '미스의 숲' 조성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까지 통과됨에 따라 전주종합경기장 재생사업인 '시민의 숲 1963' 프로젝트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시는 지난 1963년 도민과 시민의 성금으로 지어진 전주종합경기장에 △예술체험을 할 수 있는 '예술의 숲' △생태놀이터로 꾸며지는 '놀이의 숲'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의 특색을 살린 '미식의 숲' △국제 규모 전시컨벤션센터가 들어서는 'MICE의 숲' △'정원의 숲' 등 다섯 가지 숲을 조성하는 시민의 숲 1963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황남중 전주시 종합경기장재생과장은 "전시컨벤션센터는 전주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전주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새만금을 비롯한 주변 연관산업과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후의 행정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사전투표에 나선 김승수 전주시장 부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일 첫날인 지난 4일 오전 8시, 김승수 전주시장이 덕진구청에 마련된 진북동 사전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기업 모집

전주시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근무한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300만 원을 더하고, 정부가 6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총 120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또한 참여 기업에게도 채용유지지원금으로 30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시는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참여 기업에 국비지원금으로 청년근로자 1인당 48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전주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중 제조업 기업으로, 참여기업별 최대 5인 이하까지 지원 가능하다. 기업 모집은 공제 대상 청년이 70명이 될 때까지 한다.

신청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 청년협력팀(063-281-254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 신청장사회연대경제국 관계자는 "취업과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민 건강-의료 안전망 구축 '맞손'

시, 전주시의사회·예수병원·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전주형 통합돌봄' 추진 협약

대한민국 통합돌봄 선도도시인 전주시가 시민들을 위한 촘촘한 건강-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 의료인, 의료기관들과 손을 맞잡았다.

전주시와 전주시의사회, 예수병원,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 3일 전주시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주시 통합돌봄 총괄자문관, 이상권 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센터장, 김철승 예수병원장, 김관희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형 통합돌봄 2022'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건강-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와 참여기관들은 협업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복지·돌봄서비스 △주거 △영양 △문화와 여가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참여기관들은 건강-의료 안전망을 통해 이용자의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거주지에서 편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 마을주치의 역할을 담당한다.



전주시와 전주시의사회, 예수병원,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 3일 전주시청에서 '전주형 통합돌봄 2022'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건강-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총 4개의 사무국이 통합돌봄정책대상자 3,000명을 개인별 건강상태에 따라 1차~4차의 안전망으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민간자원과 연계한 복지-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의 건강-의료안전망 공통 추진사업은 △임상영양사회의 식이지도 교육을 통한 '당뇨어르신 집중 관리사업' △통합돌봄 서포터즈와 함께하는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어르신 집중관리사업' △코로

나 장기화로 인한 우울상태 조사 및 해소를 위한 '다독다독 마음돌봄사업' 등이다.

김승수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뜻을 함께해 주신 전주시의사회와 예수병원,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지나간 시간 동안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모든 의료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단 한 사람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완성시킨다

전주시, '전주형 통합돌봄' 보고회 개최 7대 추진과제 제시

전주시가 전주형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전 국민 돌봄보장으로 나아가는 길잡이가 되기로 했다.

전주시는 지난 4일 변재관 통합돌봄 총괄자문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형 통합돌봄 2022'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서 시는 '통합돌봄을 넘어, 전 국민 돌봄보장으로'라는 비전으로 7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7대 추진과제는 △건강-의료 안전망 확대 및 고도화 △75세 이상 전수조사 분석을 통한 통합적 돌봄서비스 체계 정비 △혁신적인 민·관 협업 강화를 통한 통합돌봄 지역 안착 △지역재생-통합돌봄-사회적 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 △융합형 통합돌봄 확대·강화 △통합돌봄 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국화를 위한 실재적 준비 구체화이다.

시는 이러한 7대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올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완성시킨다는 구상이다.

먼저 시는 75세 이상 어르신 전수조사를 통해 돌봄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하고, 돌봄이 꼭 필요한 고위험군 사각지대를 발굴해 제공기로 했다. 발굴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대상자 특성

에 맞는 돌봄서비스의 연계·조정·통합으로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게 된다.

시는 또 통합돌봄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을 통해 보건·의료분야와 복지·돌봄간 통합적 시스템 사용으로 대상자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통합돌봄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주형 통합돌봄'의 논리모형을 구축하고 진행매뉴얼을 완성해 전국 어디에서나 전주형 통합돌봄을 쉽게 적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75세이상 고령자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가장 고위험군 어르신 2,660명, 장애인 300명, 정신질환자 40명 등 3000명의 통합돌봄 정책대상자에게 6개 분야 총 54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건강-의료 안전망을 통한 돌봄대상자들의 건강생활 강화·필요도와 욕구에 대응하는 돌봄의 체계적인 지원에 힘쓰고, 일자리 창출까지 고려하는 등 전주형 통합돌봄을 통해 대한민국 돌봄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